

u-City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 순 형*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and Institution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u-City Service

Soon-Hyung Park*

요 약

The vision of u-City is an implementation of ubiquitous environments that makes anybody to be able to access the sourc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anywhere and anytime with any method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law and institution of u-City about a role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have a new growth power. We need to improve the related law and institution with standardization of u-City service to regulate and coordinate diversity of main organ and business area. In this paper, we select service modes to consider the priority order of service and suggest a reform measure of law and institution classified by service models

Keyword : u-City service, ubiquitous, law, i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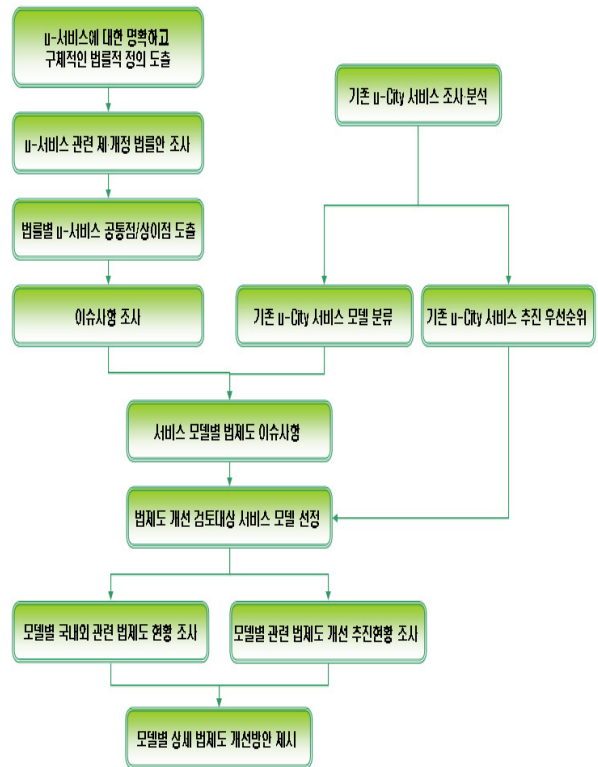
1. 서 론

지난 20여 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IT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생활과 기업, 삶의 곳곳에 변화를 초래했으며, 경제 및 행정, 문화, 교통, 편의 시설 등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모습을 변화시키며 유비쿼터스 기반의 미래도시로 진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서비스를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 문화, 행정, 방법·방재, 환경, 주거, 보건·복지, 교통 등 도시 내 주요기능에 u-서비스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2010년까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u-City 사업에 20조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비하여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u-City 공동운영 등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절감 비용으로 u-City 서비스의 대상 폭을 넓혀 실제적인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한 관련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u-City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제도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추진주체의 다양성과 사업영역의 다양성을 조정, 통합하기 위해 u-City 서비스의 표준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추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상세검토대상 서비스 모델 선정하고 서비스 모델별 상세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u-City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전략을 기술하였고 3장에서는 u-City 서비스 구축·운영에 대한 장애요소 및 문제점 조사·분석 그리고 4장에서는 서비스 추진 우선순위를 고려한 법제도 개선 상세검토대상 서비스 모델 선정하였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도출한 서비스

모델별 상세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u-City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전략



3. u-City 서비스 구축·운영에 대한 장애요소 및 문제점 조사·분석

3.1 u-City 서비스 관련 기존 법제도 이슈사항 조사

- (1) u-city 관련 주체와 정부 부서간 조정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 (2)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법 부재
- (3)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지자체 부서간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통합
- (4)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 및 역할 분담 문제
- (5) u-서비스 적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 미비

(6)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신상보호

도 이슈사항을 도출한다.

3.2 기존 u-City 사업을 대상으로 u-City 서비스 조사·분석

4. 서비스 추진 우선순위를 고려한 법제도 개선 상세검토대상 서비스 모델 선정

(1) u-City 서비스 현황 조사

- 1) 특별·광역시별 그리고 도별 u-City 총괄 지도를 작성한다.
- 2) 특별·광역시별, 도별, 시·군별 u-City 서비스 추진 전략을 조사한다.
- 3) 특별·광역시별, 도별, 시·군별 u-City 서비스 추진 현황을 조사한다.

4.1 u-City 서비스 우선순위 도출

미래사회의 국민들의 니즈와 도시공간별 활동의 의한 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u-City 서비스 모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u-City 서비스 모델의 우선순위별 단위시스템을 도출한다.

(2) u-City 서비스 현황 분석

지자체와 IT기업에 대한 u-City 서비스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을 하고 u-City 서비스 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한다.

4.2 법제도 개선 상세검토대상 서비스 모델 선정

3.3 기존 u-City 사업의 서비스 모델 분류

(1) 법제도 개선 상세 검토대상 서비스 모델 선정

- 1) 기존 u-City 사업사례 및 동향을 조사한 후 내부 브레인스토밍을 실시를 하여 서비스모델 유형을 분석한다.
- 2) 서비스 모델 구현을 위해 분류 기준을 설정한 다음 설정에 따른 매트릭스 분류를 실시한다.
- 3) 매트릭스에 맞는 서비스 유형을 조사한 다음 서비스 유형별 적용할 기술과 현실을 고려하여 표준 서비스 모델을 도출한다.

도출된 u-City 서비스 모델의 우선순위별 단위시스템과 서비스관련 제·개정 법률안 그리고 서비스 관련 기관별 정비대상 법령을 바탕으로 단위시스템별 제·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조사한 다음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 법제도 개선 상세 검토대상 서비스모델을 선정한다.

3.4 기존 u-City 사업의 서비스 모델별 법제도 이슈사항

(2) 단위시스템별 제·개정 법률 주요내용 조사

u-City 사업의 서비스 모델과 u-City 서비스 관련 기존 법제도 이슈사항을 바탕으로 환경, u-교통, u-보건·복지, u-방법·방재, u-시설관리, u-문화·관광, u-물류, u-work, u-교육, u-비즈니스, u-행정 등 u-서비스시스템별 법제

1) u-방법방재

전기통신기본법,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2) u-교육

교육기본법

3) u-비즈니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전자

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비스 모델별 상세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5.1 국내외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법제도 개선 검토대상 서비스 모델에 대해 선행연구를 조사한 다음 서비스 관련 제개정 법제도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5.2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현황 조사

법제도 개선 상세 검토대상 서비스 모델에 대해 중앙부처의 u-City 서비스 관련 부처간 협의 중인 입법안과 중앙부처에서 u-City 서비스 관련하여 국회 계류중인 입법안에 대해 u-City 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을 도출한다.

5.3 상세 법제도 개선방안

법제도 개선 상세 검토대상 서비스 모델에 대해 서비스 관련 제개정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중앙부처간 협의 중인 입법안과 u-City 서비스 관련하여 국회계류중인 입법안에 대해 u-City 서비스 관련 공통점과 상충점을 조사한다. 그리고 지자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그리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u-City 서비스 관련 상세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6. 결 론

실제 지자체가 u-City 서비스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의 설문 조사 중 법·제도 미흡(74.1%)이 예산부족(63%) 보다도 더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IT기업도 법제도 미흡이 42.9%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u-City 서비스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u-City 서비스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u-City 건설법의 제정으로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 부처간의 이해관계 정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중복사업 방지)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u-City 서비스의 구축·운영에 대한 장애 요소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한다. 그다음 서비스 추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상세검토대상 서비스 모델 선정한 후 서비스 모델별 상세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1] 정용엽, “u-헬스케어에 있어서 디지털의료 정보의 법률적 보호”, 국제법무연구 제 10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6.2.
- [2] 정용엽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경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2.
- [3] 조영섭 외,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보안요구 사항 분석”, 정보보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4.
- [4] 김준한, “유비쿼터스 정부의 쟁점과 전략”, 행정논총 제42권 제4호, 서울대행정대학원, 2004.
- [5] 김선경,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자정부의 기본구도 탐색”, 도시행정학회보 제16권 제2호, 2003.